

**제**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후 지구상에 예전과 같은 식민지는 새로 생길 수도, 생기지도 않는다. 이렇게 된 것은 약소국이 힘이 커진 것이 아니고, 인류의 도덕적 수준이 높아져 과거와 같은 식민지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영토점령은 없지만 경제침략이란 용어가 쓰이듯이 경제전쟁이 치열하게 되었다. 베트남이 캄보디아 주둔 군인을 철수한 것도 잘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보여진다.

공산주의 체제의 조정과 지구 환경문제의 대두, UR협상, 가트체제의 변화 등 변혁기에 우리나라 축산농민이 잘사는 길은 무엇인가 라는 고민은 관련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한번씩 안할 수 없는 문제이다.

다행히도 그간 축산진흥기금이 1조원을 돌파하는 등 축산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이 그만큼 확보된 것은 축산농가의 희생 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수 없다.

이들 재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축산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1조원 돌파를 계기로 다시 한번 재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

### 1. 양축농가의 합의 필요

지금까지 기금은 관리들이 축산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우선 순위를 정해 배정해 왔고, 한차례의 공청회 등이 있었으나 축산농가의 합의를 이루는 데는 부족하였다.

시설지원 양축농가의 선정에 있어서도 가장 민원의 대상이 되는 부분으로 시군 단위에서 양축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진일보한 방법이나,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운영되어 합의 도출에 미숙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축진기금의 대부분이 수입최고기 판매차익금으로 이루어져 직접 육류를 생산하는 농가나 대체관계에 있는 농가의 간접 납부로 조성된 기금이고, 농발기금도 축산농민이 배합사료 등 생산자재를 구입할 때 납세한 자금이기 때문에 기금 사용 방식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납득할 수 있게 된다.

기금 조성의 과정이 이러하므로 외국의 자조금 사용에서와 같은 방법이 도입되어 모든 납세자가 공동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도축장, 판매장, 공동방역, 가격안정 등에 투자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사용 목적이 뚜렷하면 불신감을 해소될

## 책가방이 크다고 공부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정부의 다양한 메뉴 제시에도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2. 새시대 새로운 아이디어 필요

이제는 개발독재가 발 못붙이는 문민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뿐이 아니고 일본, 이태리, 대만 등 세계적인 흐름임을 알 수 있다.

최근 국내 재벌회사도 가치관의 변화없이 살아 남을 수 없음을 깨닫고, 새로운 변신을 도모하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구태의연한 경영방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식으로 고전하는 회사를 본다. 새로운 사람들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야 한다.

3. 가격안정에 투자해야

이제 우리 경제도 중진국 수준에 도달하였고, 소비자 의식도 성숙되었기 때문에 축산물의 가격과 품질(안정성)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투자해야 한다.

소비자 물가가 전년대비 5% 이상 상승하면 정권 불안정이 올 정도로 성숙화 되었기 때문이다. 가격안정을 위해서 생산조절기능과 공급조절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은 어렵게 된다. 정부가 계열화사업 등으로 수직통합으로 계층간 통합을 이루려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농민은 극히 적은 것으로 보인다.

전업농의 붕괴가 시작되면 전업농에 자본을 지원해 준 사료공장이 농장을 떠안게 되고, 은행들이 사료회사를 부담함으로써 외형이 크기 때문에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리라고 예상된다.

5. 기술농업 추진

신농정이 기술농업을 추진하면서도 현실은 대학연구기관이나 진흥청 산하 연구기관들이 양축가에 그리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새로운 연구기관의 설립과 기존 연구기관의 활성화가 어느 쪽이 효율적인가를 검토해야 될 것이다. 특히 농업분야에서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어 있어 사료, 종축, 기자재를 통해서 외국기술이 수입되는데 국내 연구기관들이 외국기술 보다 한발 앞서 양축농가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려면 연구기관과 축산업계와의 협조체제가 긴밀해야 함은 물론이다.

'94년도 예산편성 방향이 정부가 메뉴를 정해 주고, 품목별 생산자단체가 구체적으로 요리를 해야 하는 것은 한발짝 더 진보된 방법이지만, 메뉴 작성에서 부터 양축농가의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민관협조체제가 더욱 굳어져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투자액이 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느 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자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잘 하는 것 아니다

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설자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제야말로 가격안정에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두어야 한다.

가격과 함께 품질(안정성)의 문제도 위생, 방역에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져 생산성을 높이고, 휴약기간을 지켜도 손해가 없는 사육환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전업축산의 붕괴 방지

신농정이 전업축산에 초점을 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경쟁력있는 축산을 강조한 나머지 생산성 경쟁이 아닌 자본능력 경쟁으로 이어져 축산농민의 계층분해가 이루어진다면 축